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437>

JCCT 2024-7-50

한반도 통일 과정의 경제적 과제와 해결 방안

Economic Challenges and Solu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Process

홍경석*, 이경행**, 박상혁***

Kyong-Seok Hong*, Kyoung-Haing Lee**, Sang Hyuk Park***

요약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민족적 과제이자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 조달, 상이한 경제 체제의 통합,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경제적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비용의 객관적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한 경제체제의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과 시장경제로의 단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 SOC 확충 및 인적자본 개발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경제의 제도약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한반도 통일, 통일 비용, 경제 통합, 남북한 경제 격차, 경제 시너지

Abstrac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only a national aspiration but also holds significant economic implications. By maximizing the economic syner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reconstructing the North Korean economy, balanced development across the peninsula can be promoted. However, the unification process will face various 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the substantial costs of unification, integrating different economic systems, and bridging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two Korea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se anticipated economic issues and propose systematic and phased solutions. Specifically, it discusses the objective estimation of unification costs and funding strategies, suggests effective integration methods for the disparate economic systems of the two Koreas, and identifies policy tasks to reduce economic disparities. The paper reviews existing studies on unification costs, explores strategie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through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gradual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and proposes concrete 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North Korea's social overhead capital (SOC)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The goal is to establish a solid economic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create opportunities for the economic resurgence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Unification Costs, Economic Integration, South-North Economic Disparity, Economic Synergy

*정회원, 중원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5월 15일, 수정완료일: 2024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5일

Received: May 15, 2024 / Revised: June 4, 2024
Accepted: June 15, 2024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Dronebot Military, Jungwon Univ, Korea

I. 서론

한반도 통일은 민족적 과제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분단 극복을 통해 민족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 조달, 상이한 경제 체제의 통합,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경제적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일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남북한 경제 체제의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남한 GDP 대비 연 7~12%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통일의 시기와 방식, 통합 수준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 훨씬 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통일 후 30여 년간 구동독 지역에 투입된 재정 이전 규모가 2조 유로를 상회하는 등 통일 비용 부담이 상당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치가 과다하며, 상당 부분 민간투자로 충당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1][2]. 또한 분단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통일순비용은 크지 않고, 통일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3]. 이처럼 통일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면밀한 비용 추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전환,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등 단계적 접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3].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참고하되 북한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 SOC 확충, 인적자본 개발, 소득보전 정책 등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3].

이 같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일은 단 순히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 통일비용

을 미래 투자로 간주하고, 남북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경제통일의 난관을 극복하고 민족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다.

II. 통일 비용의 추정과 자원 조달 방안

통일 비용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 비용의 규모는 통일의 시기와 방식,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의 통합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통일 비용의 효과적 조달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뿐 아니라 다각적인 자원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통일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대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통일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통일 자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일 국공채'를 발행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통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통일 외교도 중요하다.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 주변국의 경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자원 부담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 자원 마련을 위해 국가부채를 활용할 여력이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공공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3]. 통일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수 조 달러 내외의 국가부채 증액도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외 민간자본 유치까지 고려하면 통일 자원 조달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물론 통일 비용 조달이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저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편익과 미래 비전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 비용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혜롭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통일 비용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남북한 경제체제의 효과적 통합 방안

1. 시장경제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계획경제 체제에 익숙한 북한 경제를 단기간에 시장경제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3][4].

초기에는 북한에 시장경제 요소를 점차 도입하는 '체제 내 개혁'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가격 자유화, 기업 경영 자율성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기능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개혁 초기 농산물 가격 자유화, 기업 자율권 확대 등의 조치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3].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유화를 통한 소유구조 개편, 금융·재정 제도의 확립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로의 전면적 이행을 도모해야 한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격 자유화 범위 확대, 사법제도 정비 등이 후속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4].

이 과정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농업 부문의 가격 자유화,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외자 유치 등 점진적 개혁 전략을 택함으로써 경제 체제 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3]. 북한 경제에도 유사한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시장경제로의 안정적 이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통일 과정에서는 남북한 산업의 효율적 재배치와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현재 남북한의 산업구조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우선 제조업 부문에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을 결합한 '분업 구조' 형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북한에, 기술집약적 산업은 남한에 배치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남한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제 분업 구조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3].

한편 농업·서비스업의 경우 남북한 간 협력을 통해 북한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의 농업 기술과 유통·물류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하고, 관광·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4].

이러한 산업 구조조정 과정은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보편적 고용'을 실현하고,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공동 R&D,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인력의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도 배양해 나가야 한다[3].

표 1. 남북한의 산업구조 비교

Table 1. Incident Overview (단위: %)

구분	남한	북한
서비스업	62.5	32.9
농림·어업	2.0	23.8
제조업	27.9	18.3
광업	0.1	10.0
건설업	5.6	10.2
전기·가스·수도업	1.9	4.8

자료: 통계청(2022).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보도자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경제통합은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전환, 균형있는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체제 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남북한 경제의 비교우위를 살리는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경제통합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도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 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통합의 길, 그 길이 곧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IV. 남북한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1. 북한 SOC 확충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북한 경제의 재건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취약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하다. 에너지·교통·통신망 등 경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규모 SOC 투자는 선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우선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송배전망 구축,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남한의 1/16 수준에 불과하며,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 가동률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력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인프라의 전면적 보수와 현대화도 필수적이다. 국토중단철도와 아시안하이웨이 구축을 통해 대륙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2]. 특히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 과제로, 북한 경제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전역에 대한 이동통신망·인터넷망 보급, 전자결제·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스마트시티 조성, 미디어·ICT 산업 육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SOC 투자는 북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남북한 경제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을 통해 재원을 분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Table 2. Incident Overview

구분	남한	북한	남/북 (배)
발전설비용량 (MW)	138,195	8,270	16.7
도로총연장 (km)	114,314	26,203	4.4
철도총연장 (km)	4,192	5,323	0.8
항만하역능력 (천톤)	1,342,821	43,611	30.8

자료: 통계청(2023)

2. 남북한 주민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
통일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분배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

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 정책이 요구된다. 최저임금 보장,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구매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제도의 전국적 시행도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3].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의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소득 창출 역량을 높여야 한다. 기초교육 확대, 직업기술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북한 인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남한 수준의 생산성에 근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청년들에 대한 창업 지원, 남북한 공동 R&D사업 추진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남북 주민 간 교류 확대로 동질성 회복과 사회통합도 도모해야 한다.

한편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단계적 도입도 중요한 과제이다. 공적 의료보험과 연금 제도의 확대 시행, 주택 공급 확대, 영유아 보육 지원 등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는 남북한 간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소득재분배 정책과 인적자본 투자,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병행될 때 남북한 경제의 격차를 해소하면서도 상생의 통합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통일의 경제적 효과도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위한 개방 전략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을 통한 국제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 정상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과 해외투자 유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4].

남북경협 제도와 국제화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등 기존 남북경협

사업을 복원·확대하는 한편,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 광공동특구 조성 등 새로운 경험 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남북경협을 국제적 협력 틀 속에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과 국제 비즈니스 관행 체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도 본격화되어야 한다. 나선특구, 신의주특구, 개성공업지구 등 기존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북한 전역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동북아 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비전도 필요하다.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과 연계한 초국경 경제벨트를 조성하고, 에너지·물류 인프라를 공동 구축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역내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신경계구상과도 맞물려 남북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 공간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개방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결단과 개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사회와의 건설적 관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고, 개혁·개방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뒷받침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북한 경제의 국제화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의 핵심 과제인 동시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과제와 그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자 역사적 소명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진통이 따르는 대장정이 될 것이다. 막대한 통일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상이한 경제체제를 어떻게 수렴시켜 나갈 것인지, 경제적 격차는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통일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그 끝에는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역사적 기회가 놓여 있다.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 경제를 재건하고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2].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고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경우, 북한 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대외무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북한 경제의 잠재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남북한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남북 경제협력의 심화는 동북아 지역 경제통합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3]. 한반도 신경계구상과 연계하여 남·북·중·러 간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면, 북한 경제를 동북아 경제권에 편입시키는 한편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복원함으로써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통일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결코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을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통일 재원 마련과 경제통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지난한 과정이 될지라도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다.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와 용기, 인내와 연대의식이다. 그 간절한 열망으로 경제통일의 난관을 극복하고,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통일의 경제적 과제를 짚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통일비용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남북한 경제의 점진적 통합방안,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는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앞으로 경제통합의 로드맵을 더욱 구체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겠지만, 그 끝에는 민족

경제의 도약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 시너지를 발휘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 질서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3][4]. 그날을 향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갈 때이다. 평화통일의 그날,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다.

References

- [1] “Unification Costs Estimated at 2,167 Trillion Won Over 10 Years.” Yonhap News Agency, 11 May 2018,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1068600009>.
- [2] Hong, Soon-jik. “The Economic Meaning and Challenges of Unification.”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4, http://m.fki.or.kr/bbs/bbs_view.asp?cate=news&content_id=1c63f858-c100-4b15-9ba6-426481c6aa90&page=151.
- [3]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Economic Effects of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2014.
- [4] Lim, Kang-taek. “The Meaning and Challenges of the Economic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6.